

카메룬 과학기술 개발협력 방안과 기독교적 시사점

강희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요 약

선진국들이 지난 60여년간 약 2조 5천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발전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선사업 형태의 원조는 해당 사업 종료와 함께 그 효과가 사라졌으며, 개도국의 사업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부패, 시장왜곡,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원조가 비생산적 분야에 투입되고, 부정부패로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등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종료되어도 효과가 지속될 지원 방안 등, 새로운 협력 모델 및 지속가능 모델이 필요하며, 국제사회 및 선진국의 필요 및 추정에서가 아닌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개도국 지원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국과 카메룬 사례를 통해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으며, 과학기술 개발협력방안으로 '센터 주도형 적정기술 개발', '기업 연계형 적정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형 적정기술 개발'을 제안한 후, 결론적으로 기독교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 개도국 과학기술 개발협력 배경

1. 선진국들의 파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은 왜 여전히 어려운가?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0년 48억 달러에서 2011년 1,474억 달러까지 지원금을 30배 이상 증가시키며 다양한 원조 사업을 추진 인적·물적 자원 등 60여 년간 약 2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한 개도국 발전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위: 억 달러, %)

구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누계
ODA 총지출	48	72	79	156	296	309	505	664	601	1,185	1,413	1,474	24,776
ODA 순지출	46	65	67	132	261	287	543	589	539	1,078	1,284	1,335	22,107
순 ODA/GNI	0.51	0.48	0.33	0.34	0.35	0.33	0.33	0.26	0.22	0.33	0.32	0.31	-

자료: 주동주 외(2012).

<표 1>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지원 효과는 지원 당시만 반짝 존재하고 지원이 끝나면 소멸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표 2〉 참조). 자선사업 형태의 원조 효과는 해당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졌으며 말라리아 퇴치 모기장 무료보급 사업의 경우, 개도국의 사업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급사업 종료 후에는 현지인들이 모기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부패, 시장왜곡,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원조가 비생산적 분야에 투입되고, 공무원 등의 부패로 지원금이 적합하게 집행되지 못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종료되어도 효과가 지속될 지원 방안 등, 새로운 협력 모델 및 지속가능 모델이 필요하며, 국제사회 및 선진국의 필요 및 추정에서가 아닌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연구의 의의	연구 목적 및 결과
Theodore W. Schultz (1953)	저개발국의 경제적 기본 여건과 발전의 저해요인 규명	개발도상국 농업부문이 부진한 것은 농민이 태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인적투자과 기술혁신이 있으면, 개발도상국 농민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에 반응함
Jeffrey D. Sachs (2006)	정치, 문화, 기후의 측면에서 발전도상국의 빈곤을 분석	선진국들이 원조액을 늘리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원조를 실행한다면 2015년까지 빈곤의 절반을 없앨 수 있고, 2025년까지 빈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봄
Joseph E. Stiglitz (2007)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원조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개혁의 필요성 모색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 선진국 위주로 규칙을 정함으로써 빈곤국의 빈곤 심화, 개발과 물질 위주의 사고, 개발도상국의 자체 의사결정권한 박탈,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불균형 양산,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착화
Burnside & Dollar (2000)	국제원조기구와 공여국들이 선택적 지원방침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침	전반적으로 개발원조가 좋은 경제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원국에 제공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Milton Friedman (1958)	원조의 효과성 부정, 원조로 인한 경제발전의 비효율성 지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원조가 아닌 자유무역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원조가 비효율과 부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Johan Galtung (1996)	원조의 표준화가 서구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개발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	ODA는 빈곤을 정당화하고 서구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
Dambisa Moyo (2010)	빈곤의 함정과 원조의 악순환 지적	서방국가의 원조자금이 아프리카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시장구조 왜곡, 빈부격차의 심화, 자원유출, 환경 파괴를 초래
Paul Mosley (1986)	원조액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실증분석	원조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않음

자료: 이정협 외(2012).

〈표 2〉 원조 효과 관련 기존 논의

2. 지원 효과가 개도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 방안이 필요

개도국 지원이 원조의 성격을 넘어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최근 NGO 및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개도국의 문화, 환경 및 국민적 수요를 고려한 적정기술을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과거의 개도국 지원 현황, 문제점 및 최근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개도국 지원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문제점

과거 자료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카메룬을 비롯한 개도국 지원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 고기만 주는 원조였다는 것이다. 고기 잡는 법이 아닌 잡은 고기를 주는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수여국을 의존적 존재로 전락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차원의 원조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예산 배정에 따른 밀어내기식 원조나, 성과 과시형 1회성 원조, 설치하는 지원하나 운영 및 유지보수는 고려되지 않은 불완전한 원조 등이 그것이다.

셋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원조금의 50% 정도가 증발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전시행정이 많고, 정부가 계획은 세우나 실행은 미진한 현실이다. 예를들어, 정수시설,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등 많은 정부차원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학교의 교육시설이 매우 미흡한데 원조금이 상당부분 증발하여 기자재 구입이 부족한 것도 주원인이다. 아울러 지원국이 많다보니 수혜국이 고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지원제도 부족,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세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던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다섯째, 카메룬 국민에 대한 국민성 및 문화적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상 아시아 국가와는 국민이라는 개념, 우리라는 개념이 다르고 인종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효율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옛것을 쉽게 바꾸지 않는데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다가 과거 관습으로 곧 회귀하곤 한다. 공유개념이 희박하여 사회적 기업이 쉽지 않으며, 자기 것은 있으나 공동의 것은 없다. 같이 잘살아보자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빈곤하다보니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기관보다는 개인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다. 원조 받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저변에는 백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2. 시사점

개발협력이 한차원 성숙해지고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첫째, 원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란스럽게 큰일을 하는 것보다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하고, 정착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민간의 수십 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대학 및 의료기관으로 발전한 것은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

둘째, 종합적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무팀은 전체적인 그림 없이 현업에서 허둥지둥하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책임지고 감독할 기구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여건상 감시 및 감독기구와 함께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병렬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 수익창출 → 카메룬기업 참여(한국기업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원조형에서 자립을 위한 협력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수준 및 시장조사를 포함한 공동기획(원자재 및 인력조달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고, 기술개발, 인력교육, 실용화, 판매망 구축, 생산, 판매 등이 필요하며, 경영기법, 재무, 인사 등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다음 기획 시 반영 등 체계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설립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의 법.제도 개선 지원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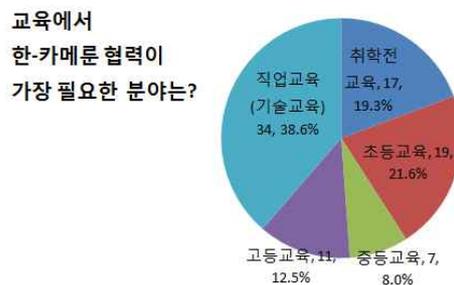
Ⅲ. 카메룬 과학기술 개발협력 수요

1. 한-카메룬 협력 수요조사 개요

카메룬과의 과학기술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메일 및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카메룬인 대학교수, 중등교사, 공무원, 건축엔지니어, 사업가, 대학생, 국회의원, 회사원, 지역주민과 카메룬 거주 한국인 사업가, NGO, 대사관직원으로 하였으며 모두 88명이 응답하였다. 연령층은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도시가 84.1%, 지역이 15.9%이었다. 응답자 교육수준 분포는 대졸 이상(고등교육)이 51.5%이며 초등교육도 14.8%이었고, 성별로는 남자 60.2%(53명), 여자 39.8%(3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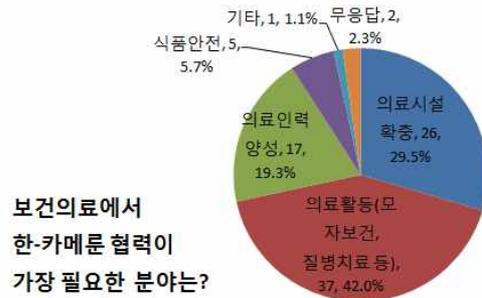
2. 협력 수요

교육 분야 협력 수요는 직업교육이 38.6%로 가장 많았는데, 카메룬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그 다음은 초등교육으로 2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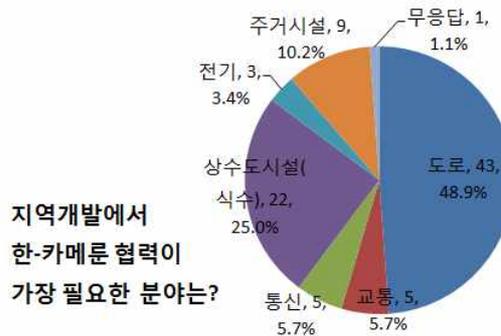
[그림 1] 교육 분야 협력 수요

보건의료 분야 협력 수요는 의료 활동(모자보건, 질병치료 등)이 42.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시골지역은 사소한 질병도 약이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치료를 위해 무당을 찾기도 함)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2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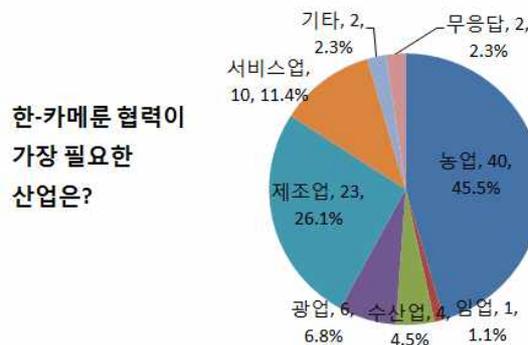
[그림 2] 보건의료 분야 협력 수요

지역개발 분야 협력 수요는 도로가 48.9%로 절반가까이 도로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 비포장도로가 많아 물류비용이 매우 높으며,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카메룬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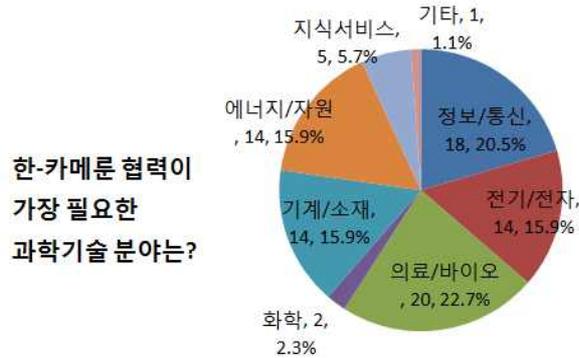
[그림 3] 지역개발 분야 협력 수요

산업 분야 협력 수요는 농업이 45.5%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제조업으로 26.1%이다. 제조업 진흥을 통한 산업화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4] 산업 분야 협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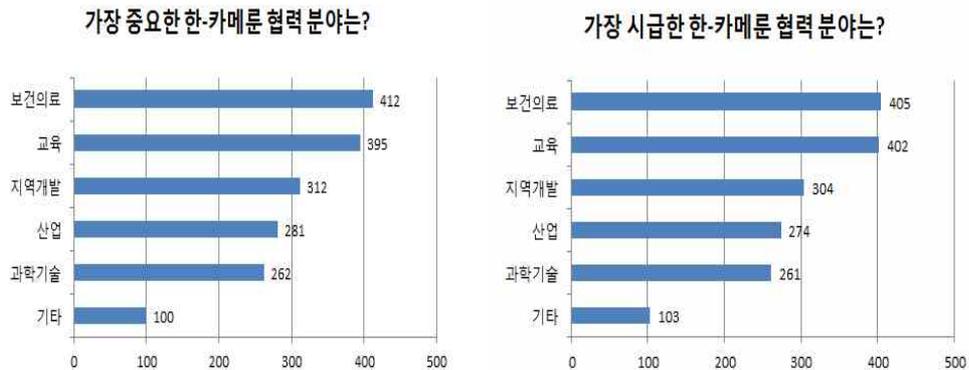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 협력 수요는 의료/바이오분야(22.7%), 정보/통신 분야(20.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기계/소재였다.



[그림 5] 과학기술 분야 협력 수요

3. 시급도 및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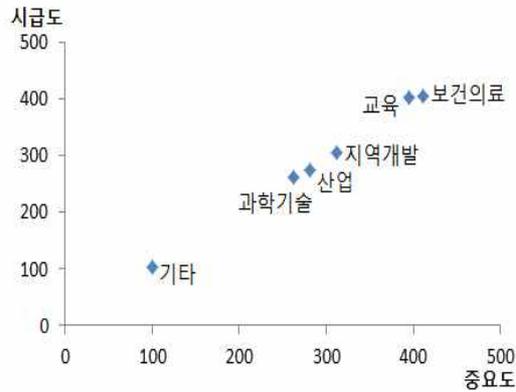
시급도 및 중요도는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협력할 수요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은 교육으로 나타났고, 시급도 및 중요도 순위 동일하다.



[그림 6] 협력의 중요도 및 시급도

이는 한-카메룬 협력을 국가차원의 발전에 활용하기보다는 개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전 국제적 원조방식이었던 개인적 필요 지원 차원의 접근으로 개인의 건강(보건의료) ⇒ 직장을 위한 스펙(교육) ⇒ 내가 사는 지역(지역개발) ⇒ 산업 순이며,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데 크게 관계가 없는 과학기술은 맨 나중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협력 방식은 국가적 수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과학기술이 있어야 산업이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야 지역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의료기기도 자체 생산해 자체적인 보건의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고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7] 협력의 시급도 및 중요도

4. 기타 수요(응답자 의견)

기타 응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카메룬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산품에서 최종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전환산업이 필요하다.’ ‘카메룬인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높은 표준 교육을 받고 있다. 카메룬인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지식의 활용이다.’, ‘지역자원과 지역역량 구축을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프로젝트들은 식품안전 제공, 공공보건정책 증진, 교육개발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협력은 정보통신, 전기공학, 기계공학, 토목공학, 공정공학 등의 임계치를 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카메룬은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 많은 등 통신부문의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개발 측면에서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방법을 카메룬에 가르쳐 준다면, 카메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한-카메룬 협력 수요조사 시사점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공무원 및 국민은 현실 안주형인 것으로 나타나 좋은 협력 기회를 일회성 지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몇몇 지식인들은 국가적 필요를 알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뜻 있는 카메룬 인사들과 개도국 개발에 봉사하는 한국 NGO를 연계하고, 한-카메룬 양국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하에 한-카메룬 과학기술협력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이 카메룬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협력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카메룬 과학기술 개발협력 방안

1. 센터 주도형 적정기술 개발

센터 주도형 적정기술 개발의 목표는 물, 생활에너지 등 카메룬의 기초생활 문제의 근본

적 해소와 함께 생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 전수(MDGs 개발역량 강화 목표 반영)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UN MDGs는 개도국의 개발역량 강화가 지속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술 지원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많은 개도국(특히, 소외지역 및 최빈국)의 절대 빈곤은 가장 단순한 기술적 응용만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활용되지 않지만 초급 기술을 활용하면 큰 생산성 증대가 가능한 부분도 많이 탐지되고 있다. 이러한 잠자고 있는 생활 속 적정기술들을 전수/확산하면, 개도국의 절대빈곤 탈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적정기술 활용이 체화되고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기술, 경영 분야 포함) 및 기업 창업으로 연계해야한다.

추진방식은 1단계로 한국 정부, 카메룬 정부 및 NGO가 참여하는 적정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카메룬 정부는 적정기술개발 관련 법, 제도를 지원하고, 한국 정부는 센터운영 비용,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창업 비용을 지원하며, 효과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평가.감독한다. 센터는 위원회 사무국 역할, 센터운영 및 창업기업 관련 실무 등 동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2단계는 NGO가 운영하는 적정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개발할 적정기술 관련 사업계획(3~5년)을 센터가 기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자원배분은 센터운영 20%, 기술개발에 30%, 개발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판매망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인력양성 등 기업 창업 관련에 50%를 투입한다.

3단계는 적정기술 인력양성 및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발된 기술은 상용화 및 제품생산 단계까지 완료한 후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센터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및 제품을 기반으로 독자운영한다.

4단계는 성과평가 및 차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센터는 3~5년간의 사업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차기 사업을 제안하며, 위원회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사업 지속 여부 심사 및 추진을 지원한다.



[그림 8] 센터 주도형 적정기술 개발

2. 기업 연계형 적정기술 개발

기업 연계형 적정기술 개발의 목표는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연구소와 연계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수혜국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통해 자기 완결형 경제 구조의 기반을 구축 하며,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 성장 →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 소비 증가 → 기업 성장”의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고,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진방식은 1단계로 적정기술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센터에 공동연구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센터를 통해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며 센터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카메룬 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지원하고, 적정기술개발센터의 기획 및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카메룬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개발에 협력할 한국 업체를 선정한다.

2단계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제도(인증, 허가 등) 도입 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카메룬 정부의 R&D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3단계는 적정기술 협력 개발 및 판매인데, 제품기획, 연구개발 및 관리(센터 내 공동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 및 시제품 생산), 상용화 및 제품 생산, 홍보 및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이다.

4단계는 성과평가 및 차기 사업 추진인데, 센터는 3~5년간의 사업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차기 사업을 제안하며, 위원회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사업 지속여부 심사 및 추진을 지원한다.



[그림 9] 기업 연계형 적정기술 개발

3. 산학연 협력형 적정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형 적정기술 개발의 목표는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으로 미래수요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에 새로운 지식창출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네트워크를 총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OECD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성과가 “산학연 협력의 강도와 효과성에 좌우된다”고 강조하며, 각국에 우수한 산학연협력사례의 학습을 권고('02)하고 있고 EU는 지식트라이앵글인 연구, 교육, 혁신의 쌍방향성을 중시하면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그들 간의 연계성에 두어야 함을 강조('09)한 바 있다.

추진방식은 1단계로 산학연 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센터 내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할 재원을 제공하고, 카메룬 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지원하며, 적정기술개발센터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추진한다. 산학연 참여자는 적정기술개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단계는 효율적인 국내외 협력 추진을 위해 센터 내에 산학연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단을 운영한다.

3단계는 미래 수요 기술을 선정 및 개발하는 것으로 카메룬의 미래 수요 기술에 기반한 개발기술을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4단계는 개발기술 이전인데 참여한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5단계는 성과평가 및 차기 사업 추진으로 위원회에서 사업성과 평가 및 차기 사업 추진 여부 승인한다.



[그림 10] 산학연 협력형 적정기술 개발

V. 기독교적 시사점

우리나라도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으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들과 무엇이 달라기에 오늘과 같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나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였다는 것, 그리고 산업화 및 정보화시대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즉, 바른 국민정신이, 바른 교육을 통해 바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냈고 그 인재들이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정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100여년 전 우리도 술, 놀음으로 집안살림이 피폐하고, 남.녀, 사.농.공.상, 양반.상놈의 차별이 분명했으며, 병든 몸을 사머니즘에 의지했던 무지한 나라였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곳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이 땅을 변화시켰다. 그들이 설립한 교회, 교육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이 우리 국민의 정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술과 담배와 놀음으로부터 변화되어 근면, 성실한 농부로, 사업가로 바뀌었다. 차별받던 사람들은 차별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평등한 국민의 삶을 찾아 누리게 되었고, 무당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의료원을 찾게 되고 의료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866년 토마스 목사 순교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최초 선교 입국 이후 수 많은 선교사님들이 100년 이상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프리카는 국민이라는 개념 보다는 부족의 개념이 강하다. 국민이 같이 잘살자 보다는 내가 먼저 잘살고 내 부족이 잘살자가 중요하다. 부정부패가 여전하고, 21세기인 지금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속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한 헌신이 우리나라를 오늘과 같이 변화시켰듯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과 “함께 잘살자”는 희망을 심을 수 있다. 복음으로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 다만, 오랜 시간의 사랑과 헌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바탕위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 아프리카 개도국들에게도 한국과 같은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자가 STEPI Insight 116호(2013.4.15)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기독교적 시사점을 추가한 것이다.

<참고문헌>

- 이정협 외(2012),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동주 외(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